



공공성을 지향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국민의 지지를 만들어내자 - 5개의 발전회사, 하지만 결국 같은 발전현장의 같은 발전노동자

“전기를 만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구렁텅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손쉬운 돈벌이였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사익으로 바꾸는 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19년 1월 20일 23시 05분, MBC에서 방영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전기료 못 내리는 이유>에서 주진우 기자가 프로그램을 마치며 한 말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 발전산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발전산업의 민영화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

동서발전의 3,100억 원 국외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와 700억 원의 손실, 남부발전의 인도네시아 탄광에 대한 185억 원 투자와 전액 손실과 그 후 보여준 경영진의 무책임, 아파트 분양권처럼 거래되는 민자 석탄발전 사업권, 9·15 정전사태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이익을 토포하는 민자발전사들, 이는 모두 이명박 정권이 시도한 발전산업의 민영화 과정 속에서 강요된 실적경쟁의 결과물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2010년 이후 2개 발전회사부터 매각하고, 추이를 보며 잔여 3개사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은 민자발전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는 우회적 민영화도 진행시켰다. 그 결과 2017년 국내 발전설비 중 민간발전설비가 27%에 이르게 되었다.

민영화의 걸림돌, 발전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파괴공작

이명박 정권은 2002년에 발전산업 민영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민주노총 발전노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발전노조를 와해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휘 하에 국정원과 검·경찰을 동원했고, 발전사 경영진은 권력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 발전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발전노조 조합원을 배(非적색분자), 사과(가짜 적색분자), 토마토(진짜 적색분자)로 분류하였다. 배·사과 조합원들에게는 지속적인 회유·협박을 시도했으며,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토마토 조합원에게는 원거리전보, 표적징계, 승진 및 인사이동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결국 산업별노조인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5개의 기업별노조와 함께 6등분 되어버렸다.

발전노조 분열의 결과, 복지축소와 노노갈등

이명박 정권은 발전노조를 와해시키지는 못 했지만 세력을 축소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터놓은 탄탄대로를 통해 발전현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복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복수노조 설립의 폐단으로 노조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노노갈등만이 존재하게 됐다. 민영화 시도의 일환인 외주화로 인해 발전현장은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로 나뉘어 대립하게 됐다. 안정된 전력생산이 주된 책무인 발전현장은 협업이 아닌 분열의 노동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도,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옹호하고 노동자를 공격하는 어이없고도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서부발전 기업별노조가 보이고 있는 고인 능욕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모름지기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다시 말해 원청과 하청 간 차별은 결국 원청 내의 차별에도 당 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외주화를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원청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차별 철폐, 민영화 정책 폐지, 노동조건 개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기실 회사는 5개지만 결국 같은 발전현장의 같은 발전노동자이지 않은가? 발전5사 간 경쟁구도 속에서도 발전노조가 기업별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 김용균 장례식장 22일 서울로 옮겨... 대통령 결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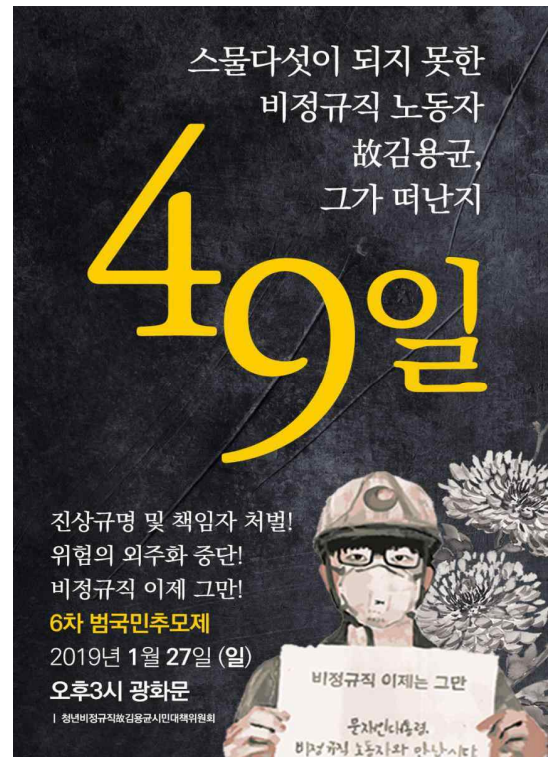
시민대책위는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 김용균 장례식장을 서울로 옮기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5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에서 1,02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고 고용노동부도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외주화 금지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그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2017년 5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는 약속, 위로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 고 김용균님의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대책위는 22일 태안 장례식장을 서울로 옮긴다. 대표단 단식농성과 청와대 앞에서 평일 집회, 추모제를 배치하여 김용균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6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리는 1월 27일(일)은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지 49일 째 되는 날이다.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추모제에 함께 참여하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



남동발전 단체협약 수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라고 중노위가 명령

그간 한국남동발전(주)와 남동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신입사원 교육시 발전노조의 교육 참여를 배제해 왔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불공정하게 배분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동발전 단체협약 제91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중앙2018공정35-37)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의 설명에 관한 시간이 소수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에 대한 접촉 및 홍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하여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은 발전노조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 10,900시간 중 35.6%에 해당하는 3,88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